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55호로 2025년 11월 7일 최봉희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도움으로써 영등포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 및 기준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선정 (안 제5조)

라. 지원제외 및 지원금 회수 (안 제6조~제7조)

마. 지원대상자 관리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5. 11. 7.~2025.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인의 신체기능 저하 및 이동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의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외부활동이 제한될 경우 근력 저하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일상적 이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1)제4조

1)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 제12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노인 복지증진과 건강증진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했으나 등급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노인의 경우, 신체활동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용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A 또는 B 판정을 받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참고로 다음 표는 영등포구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현황임.

□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등급외 A, B			그 외(등급외 C, 각하 등)		
		소계	저소득대상자 (기초, 차상위)	일반	소계	저소득대상자 (기초, 차상위)	일반
2023	250	229	67	162	21	6	15
2024	295	280	70	210	15	6	9
2025 (10월말기준)	199	191	52	139	8	1	7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의 골자인 ‘노인’과 ‘성인용 보행기’의 개념을 명확히 함.
- 안 제3조(지원대상)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외(A, B) 판정을 받은 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함.
 - 이를 통해 기존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취약 계층 노인에게 실질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
- 안 제4조(지원기준)는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1대의 보행기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후 5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재해·재난 등으로 손실된 경우에는 최대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을 규정함.
 - 이를 통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면서도 보행기 노후화나 불가피한 손실 상황에 대비한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수혜자의 편의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안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는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제외)는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 안 제7조(지원회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양도한 경우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확보하고자 한 것임.
- 안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자의 현황과 지원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복지용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보행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 이를 통해 보행이 불편한 노인의 신체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